

“민주주의·민생 회복 위해尹 신속히 파면해야”

광주·전남 각계 환영 입장

“당연한 결과...온전한 단죄를”
강기정 “내란세력 철폐 명령”
김영록 “준엄한 법적 심판을”
시민단체 “강력한 처벌”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광주·전남 각계 각층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격·경제 회복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준엄한 법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히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신속한 ‘슈퍼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의 결말은 준엄한 법적 처벌과 헌법적 파면 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무너진 서민경제와 골목 상권부터 중대 기업까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는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조



광주 시민들이 지난 18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1차 광주시민총회대회에서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속한 국내 정치 안정화를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다. 그 과정 또한 참하지 않았나”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 총장을 지낸 거물이다. 얼마든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제 내란 문제를 비롯해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택 의원이 “국회·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온국민을 두려움에 몰아 넣은 윤석열이 드디어 구속됐다. 주술과 보수 유투브에 빠진 그의 국정 운영 2년은 불행 그 자체였다”며 “이제 하루빨리 엉망진창 된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 국민의 민생을 살리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 실추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치인들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비합리적 행위를 지적했다.

정재성(36) 복구의원은 “법치주의라는

대전제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처사에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최근 발생한 ‘백골단 사태’도 편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젊은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 수사 뿐만 아니라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내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

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냉전 이념과 망상에 사로잡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일 뿐”이라며 “불법 내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비상행동은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광주시민과 함께 광장을 지킬 것”이라며 “내란 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는 불법 내란을 꿈꿀 수 없는 나라의 기틀이 세워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전문가는 국격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조사·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중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세한대 교수)은 “무속·무법에 빠진 불의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격과 경제가 한 순간 추락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국정혼란을 빠르게 막는 방법은 공정·신속한 내란 죄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 뿐이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통감하고 합당한 책임을 받아야 한다. 김·경과 한재도 온전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공정한 법치국가’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에서 “더 말할 것이 없다”며 불응했다. 다음 조사는 20일 진행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속해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연행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성현·윤준명 기자

광주 법조계,尹 지지자 법원 난입에 “강력 처벌해야”

극단적인 폭력 심각한 우려 표명 시민사회단체도 엄중 조치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이 습격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지역 법조인들은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

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 등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86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해 조사 중이며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도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가담자들에게 중형 구형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역 법조계에서도 무너진 헌법질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형사사건 전문 A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만큼 우리 사회의 준법질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헌법기관을 점거한 초유의 사태는 내란 사태부터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매우 심대하게 위협해 온 연장선이기 때문에 매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부장검사 출신의 B변호사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헌법 기관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가 합법적이라는 취지로 호도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소요죄를 비롯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

들을 모두 적용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소재 대학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들이 달라지겠지만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은 분명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성명문을 내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현기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4타경 5183	1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853-3, 1853-11 단층 160㎡ 저층창고24㎡ 제조소21.33㎡ 동소 1853-2 810㎡ 동소 1853-3 407㎡ [물건번호1:방풍용수목도지외항평기,제외외단인소유단층창고및화장실매각제외[제외외건물관련현황조사및감정평가서참조]]	농업용 창고 잡종지	179,624,830 179,624,830	일괄매각, 단층지은 창고24㎡ 및 실, 목욕 1동기 부속소 재외 반과 대정 및 현황 소재지 반표시치기 있음 [자세한 사항 감정평가서참조]
[대지/임야/전답]					
2023타경 6646	1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산110-21 20968㎡	임야	293,161,600 293,161,600	지상식재유지나 무 등수상주매각포함
2024타경 126	1	장흥군 정평면 광평리 279-7 2433㎡ 동소 279-8 1567㎡	답	112,000,000 112,00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 자격증명요
2024타경 5749	1	장흥군 웅산면 상발리 274 1349㎡ [공유지소회월1/4지분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답	8,768,500 8,768,500	지분매각, 농지취득 자격증명요
	2	장흥군 웅산면 상발리 935-12 1026.9㎡ [공유지소회월1/4지분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인점도지형평기사용중, 정확현황계측량요]	답	6,931,710 6,931,71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물건일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명행일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권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요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2025. 2. 3.(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2025. 2. 10.(화) 11:00
4. 매각장소: 장흥지원 입찰[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던 기일입찰로써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 기재하고 날인해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인 발행의 지가입찰수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류를 제출한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방로 개찰을 실시해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지분유선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항상 매각결정기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취소한다. 다만, 매각기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중매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유요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양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장권이나 기입류 등을 위해서는 등래와 지장공시등 납부한 후 등래등기소멸확인증 및 등래등기소멸등기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관련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변의 위 등기를 촉탁해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만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 담당[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법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시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결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매각물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해 따로 제공한 것으로, 특히 그 중에 시종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고, 관공되는 물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전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조길호